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윤리의식의 확립방안\*

이 경 호\*\*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선진국의 정보윤리의식 정착을 위한 추세 |
| II. 정보통신윤리의 개념과 영역                       | V. 정보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운동과 교육   |
| 1. 정보통신윤리 개념                             | 1. 정보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운동       |
| 2. 정보통신윤리 적용 영역                          | 2. 정보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       |
| III.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과 정보통신윤리강령의 필요성 | VI. 요약 및 결론               |
| 1.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                  | 참고문헌                      |
| 2. 정보통신 윤리강령의 필요성                        | Abstract                  |

## I. 서론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으로 사회 각 부문에 새로운 문명의 혜택을 부여하여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사회의 무한한 자유와 편리함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생활의 편의이나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각자 개성에 알맞은 생활방식을 추구하게 하여 새로운 사회구조의 생성과 함께

\* 이 논문은 1998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2 圖書館學論集(第 28輯)

개인의 의식변화는 물론 생활관과 가치관의 다원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이 지닌 영향력과 중요성이 커질수록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실례는 지난 10여년 사이 놀라운 속도의 컴퓨터 보급 및 이용과는 상반되게 컴퓨터의 역기능에 대한 인식이 훨씬 부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최근의 한 조사<sup>1)</sup>를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를 포함한 새로운 정보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의 심각성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보화 정책은 주로 기술주도형으로 추진되어 정보사회의 기술적인 기반이 상당한 성과를 가시화 시키고 있으면서도, 기능주의에 대한 반성과 상실된 인간성으로 인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기술이 수반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과 윤리적 문제점들에 대해 불감증<sup>2)</sup>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반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윤리적 문제 심각성은 거의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 대책 마련을 포함해 윤리나 법, 제도적인 측면의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향후 정보서비스의 전망에 관한 연구 가운데 정보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과 정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보의 독점 및 공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sup>3)</sup> 기술문명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수립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는 정보화의 진전과 삶의 질의 관계를 다루는 경험과학적인 연구<sup>4)</sup>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항상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불러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개인적이든, 조직적이든 인간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며,<sup>5)</sup> 따라서 기술체계의 논리를 무조건 관철시키기 보다는 정치

1) 정보문화센터가 발표한 '정보사회 인식 및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컴퓨터의 보급으로 '개인의 자유나 생활이 침해된다', '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사회혼란이 예상된다',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적어지고 비인간화된다'는 등 컴퓨터의 역기능에 대해 각각 34.1%, 48.2%, 58.1%만이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같은 질문에 대한 1997년의 조사에서는 훨씬 높은 82.5%, 78.5%, 74.0%가 역기능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추병완, "컴퓨터 윤리교육의 과제," **한국교육**, 제24권, 제1호(1997), p. 90.

3) 송주석, "통신정보보호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pp. 737-748.

4) 최두진,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신정보문화 확산 전략," **정보화동향**, 제1권, 제4호(1997, 12), pp. 11-27.

5) 이상철, 김대군, **직업윤리** (서울: 정림사, 1998), p. 198.

적, 경제적 조건 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조건들과의 상호관계속에서 정신적 여유, 생활의 안정, 개인의 창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회의 정보화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등장한 이같은 문제들은 기존의 가치관으로 해결하기에 난해한 복잡성을 지니고 있어 기존 가치와 정보통신 기술이 조화된 윤리적 기준인 정보윤리라는 새로운 개념이 대두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정보문화의 윤리의식과 관련된 연구와 함께 정보처리 업무에 관련된 윤리의식에 관한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본연구는 최근의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윤리적 쟁점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후, 이러한 문제점들의 확산방지를 위해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윤리강령과 함께 정보윤리교육 관련 추세를 고찰하며, 정보관련 전문가들의 역할을 통해 정보사회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정보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기반조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II. 정보통신윤리의 개념과 영역

### 1. 정보통신윤리 개념

윤리란 “무엇이 정당하고 선량한 것인가를 명확히 설명하는 가치 및 규칙의 체계”<sup>6)</sup>로, 컴퓨터를 포함한 새로운 정보기술의 이용과 관련된 윤리문제는 컴퓨터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난 파장과 심각한 윤리적 문제들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를 생산,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 
- 6) 김세현, “정보처리 업무에 관련된 윤리의식에 대한 설문서,” 컴퓨터범죄와 프라이버시 침해 (서울: 회성출판사, 1989), pp. 177-214.  
 7) Ann Prentice, “Professionals Ethics,” *Catholic Library World*, Vol.56, No.4(Nove. 1984), p.181. (Virgil L. Blake, “Ethics: The Other Dimension of Professionalism,” *Public Access Services Quarterly*, Vol.2, No.1 (1996), p.17에서 재인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면을 벗어나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범죄와 지적소유권을 포함한 정보보호문제 대두 등과 같은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행태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여러 법령을 계속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그동안 많은 법률 제정과 정책 수립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비한 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매체들이 등장할 때 마다 새로운 법과 정책 수립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규가 명확하지 않을 때의 행동기준은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보윤리란 일종의 정보시스템윤리로서, 이는 정보전문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통찰력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sup>8)</sup>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보윤리는 정보사회가 정보시스템과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생활의 편리함과 유익성을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인간의 행위를 이성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도덕적 관념이다. 무어(J. H. Moor)는 이러한 정보윤리에 대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해결할 것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가 하는가를 밝혀주는 것이라 주장하였는데<sup>9)</sup>, 이 정책은 개인적, 사회적 정책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윤리는 개인의 복지와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의 체계로서, 이러한 정보윤리에는 사서 및 정보전문가 그리고 그 관련분야의 윤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sup>10)</sup> 학자들에 따라서는 컴퓨터윤리<sup>11)</sup>, 미디어윤리<sup>12)</sup>, 도서관윤리<sup>13)</sup> 그리고 네트워크윤리<sup>14)</sup>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윤리의 핵심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해결할 것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를

8) Martha Montague Smith, "Infoethics for Leaders : Models of Moral Agency in the Information Environment," *Library Trends*, Vol.40, No.3(Winter 1992), p.553.

9) J. H. Moor, "What Is Computer Ethics ?", *Metaphilosophy*, Vol.16, No.4(1985), p.

10) Smith, 전개논문, p. 555.

11) Deborah G. Johnson, *Computer Ethics*, Englewood, N.J. : Prentice-Hall, 1985.

12) C. G. Christians, K. B. Rotzoll & M. Fackler, *Media Ethics : Cases and Moral Reasoning*, 2nd ed., New York : Longman, 1987.

13) R. Hauptman, *Ethical Challenges in Librarianship*, Phoenix, AZ : Oryx Press, 1988.

14) C. G. Gould, *The Information Web : Ethic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Computer Networking*, Boulder, CO : Westview, 1989.

밝혀주는 것<sup>15)</sup>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보사용자에게는 가치적으로 선별된 정보의 향유자로서 뿐만 아니라 자기절제의 윤리가 필요하고, 정보제공자에게는 신뢰성과 안전성 그리고 평등성을 제공하는 도덕적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윤리의 강령은 이윤의 확보나 시장지배의 원리에서 벗어나 개인과 사회의 공동체적 욕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법적으로나 도덕적 명령이라기 보다는 인간과 생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성적 행동의 출발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아울러 윤리강령이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논조에 있어서 ①간결하고, ②단순하며, ③합리적이고, 실제적이고 ④포괄적인 동시에 ⑤절대적이어야 한다.<sup>16)</sup> 이러한 윤리강령에는 대개 일반적인 도덕적 의무와 함께 국가 및 인류사회에 대한 의무와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한 행동지침 사항들도 함께 기술하고 있다.

## 2. 정보통신윤리 적용 영역

정보통신윤리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 이들을 적용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sup>17)</sup> 정보통신 사용자의 윤리, 정보통신 전문가의 윤리, 정보통신사업자의 윤리가 있으며, 주제별로 구분하여 보면, 사생활보호, 데이터베이스의 운용과 접근의 문제,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소유권문제, 컴퓨터범죄와 해커의 문제, 컴퓨터시스템의 안전과 취약성, 위험성의 문제, 네트워크상에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불건전 정보의 제약성의 문제, 정보전문가의 책임의 문제, 내부 부정고발자의 문제,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의 질의 문제, 인간의 가치와 인공지능, 정보와 권력, 정보와 사회정의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규범체계의 서열상 가장 기초적이고 형식적 규범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용지침과 네티켓이 있다. 이어 도덕적 덕목과 갈등해결의 원리를 제시하는 윤리강령(The Code of Ethics)이 있고, 더 나아가 목적론과 의무론 등 포괄적, 규범적 체계들

15) 이상철, 김대균, 전계서, p. 188.

16) Blake, pp. 20-21.

17) 박정순, "정보통신 문화와 도덕의 정체성 문제(I)," 정보화사회, 통권115호(1997, 7), p. 46.

이 존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사용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국제적인 정보부자와 정보빈자 사이의 불평등, 정보제국주의와 전문화된 기술주의 그리고 문화차별성의 취약성과 침식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 지구촌 정보윤리(global information ethics)를 들 수 있다.

### III.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과 정보윤리강령의 필요성

#### 1.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

급변하는 사회환경속에서 정보의 흐름을 적절히 유도하여 올바른 정보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자원의 공유, 정보서비스의 다양화 등을 실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가상공간을 형성하는 등 국민생활에 큰 편익과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 오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흐름이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 전산망을 이용한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격권 침해, 컴퓨터 사용 사기, 해킹, 네트워크를 통한 영업비밀 및 국가기밀의 무단유출, 음란물의 유통 등과 같은 새로운 범죄 생성 외에도 사회 각 부문간에 정보화의 격차가 발생으로 정보의 오용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역간, 세대간, 정보자원(information resources)의 불평등한 배분과 정보화의 수용능력 차이로 인해 정보화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불균형적인 정보화 성장으로 가치관과 규범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정보화의 사회적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들어 정보와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sup>18)</sup>

이러한 정보통신사회의 역기능들을 도덕적 문제들과 연계하여 살펴 보면 <표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sup>19)</sup>

18) Smith, **전계논문**, p. 554.

19) 박정순, "정보통신 문화와 도덕의 정체성 문제(II)," **정보화사회**, 통권116호(1997, 8), p. 52.

〈표 1〉 정보통신 사회의 역기능 유형

역기능 유형	역 기 능 내 용
우발적 역기능	정보과부하, 시스템정지, 부주의에서 오는 명예훼손, 데이터의 부적절한 관리, 소문과 우연적 오보
사회적 역기능	의도적 오보, 편지폭격, 외설, 선동, 비인격화, 감시
경제적 역기능	광고, 조장, 강권, 데이터의 목적외 사용, 지적재산권 침해, 바이러스, 시스템 안전침해
회피적 역기능	우회화, 익명화, 업폐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표적인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은 학자들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대별하여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컴퓨터시대의 대표적인 윤리적 문제

Johnson	Forester & Morrison	Johnson & Nissenbaum	추병완	박영호 등	이상철 등
프라이버시문제	컴퓨터범죄	컴퓨터범죄	프라이버시침해	컴퓨터횡령	사생활보호
소유권 문제	소프트웨어 절도	남 용	소유권	컴퓨터자원의 절취	소유권보호
전문가 문제	해킹과 바이러스	해 킹	컴퓨터범죄	해 키	컴퓨터범죄
컴퓨터체계의 신뢰성에 대한 책임의 문제	신뢰할 수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소유권	정확성과 건전성	컴퓨터 파괴	정보에의 공평한 접근 과 보안
권력문제	프라이버시침해	프라이버시침해	접 근	서비스중단	—
컴퓨터체계의 취약성에 대한 남용과 착취의 문제	인공지능과 전문가체계	컴퓨터전문가의 책임	해킹과 바이러스	불법복사	—
—	—	컴퓨터의 신뢰성	—	—	—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자들에 따라 윤리적 문제의 유형이나 중요성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로는 프라이버시

문제, 컴퓨터범죄, 해킹과 바이러스, 컴퓨터의 신뢰성 그리고 소유권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들 가운데 국내의 불건전정보의 유통을 포함해 정보통신 윤리위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운영하는 '불건전정보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국내의 위반사례를 살펴 보면, 1997년도에 총 8,22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유형별로 세분하여 보면 <표 3>과 같다.<sup>20)</sup>

<표 3> 국내 정보통신 윤리위반 사례

정보통신 윤리 위반 유형	건 수 (%)
음란물 등 불건전정보 유통	2,979건 (36.2%)
음란물 또는 불법복제 S/W 판매광고, 통신판매사기	3,022건 (36.7%)
대화방 이용방해, 정크메일 발송, ID 도용 등	314건 ( 3.8%)
타인의 명예훼손, 유언비어 유포 등	1,881건 (22.9%)
기 타	32건 ( 0.4%)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의 호기심이나 경제적 이익추구 등을 위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기술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의존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우리는 이들의 기능불량과 오용에 더욱 취약해지는 등 건전한 정보사회의 정착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앞으로 모든 사회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정보사회에서는 비약적인 기술혁신으로 데이터의 집중화와 광범위한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 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며, 발전된 정보기술이 정치적 행정적 편의를 위해 조작된 정보를 범람시켜 시민들의 자유를 구속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많은 정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기술의 발달로 인해 적절한 정보를 선택할 수 없게 되어 공공영역의 축소를 초래해 시민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sup>21)</sup>는 우려도 예측되고 있다.

20) 박정렬, "정보윤리 정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비둘기, 통권 제17호(1998, 5), p. 16.

21) 황석만, "정보화의 허와 실을 살펴본다," 여의도정책논단 (1996 겨울호), p. 219.



이처럼 특정한 기술과 과학에 대한 의존의 정도가 심화될수록 미래는 열려진 인간적 행위의 가능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특정형태로 주어진 삶의 불가피한 조건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컴퓨터보안문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허위과장광고, 불건전정보 게재, 개인정보 무단개재 그리고 인신공격적 발언 등 실정법 위반에 준하는 윤리적 일탈행동으로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지배력 강화와 인간의 소외는 점점 깊어지면서 인간과 생명의 정체성과 관련한 기존의 통념을 부정해 현실세계의 윤리나 이상적 원리는 점차 침식되고 있다.

## 2. 정보통신 윤리강령의 필요성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구나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의 수요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올바른 규범과 윤리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정보사회의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 가운데,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여러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지 대책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여 제안되고 있다. 이 제안 가운데 박영호 등<sup>22)</sup>은 ①기술적인 통제방안을 이용하는 기술적 방지대책, ② 물리적으로 시스템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방지대책, ③컴퓨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관리적 방지대책, ④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법적, 제도적 방지대책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최영호<sup>23)</sup>는 ①법적 대처방안, ②기술적 대처방안, ③사회적 대처방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반사회적 행위들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가운데 정보윤리교육을 토대로 하고 있는 윤리적 대응은 기술적 대처방안과 함께 학자들이 컴퓨터범죄 방지대책 가운데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방안으로, 다른 유형의

22) 박영호, 김세현, 문상재, 강신각, 임주환, "컴퓨터통신망의 기술적 보호방안" 전자기술연구지, 제15-1권 (1994), pp. 38-42.

23) 최영호, "컴퓨터범죄에 대한 사회제도적 대처방안," 한국통신정보학회지, 제6권, 제4호(1996, 12), pp. 73-90.

방지대책을 토대로 한 차원 높은 방안이기에 윤리강령의 필요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의 정체성문제는 정보통신사회와 그 문화에 대한 다원론적 읽기의 윤리학이 필요하다는 맥락과도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윤리강령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보면, ①전문 직업주의 (professionalism)의 상징화, ②집단적 이익의 보호, ③회원의 에티켓규정, ④선한 행동의 고취, ⑤회원의 교육, ⑥회원의 훈계, ⑦외부 관계 장려, ⑧기본적 도덕 원칙의 열거, ⑨하위 규칙의 설정, ⑩지침의 제공, ⑪이상의 표현, ⑫회원의 권리와 의무의 성문화를 들고 있다.<sup>24)</sup>

#### IV. 선진국의 정보윤리의식 정착을 위한 추세

오늘날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정보화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과 같은 범세계적인 개방형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점차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정보통신 사회의 역기능으로 인해 정보통신 서비스의 정당성과 안전성, 신뢰성 확보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윤리<sup>25)</sup>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방안 마련 등 정보보호 요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정보통신을 활용한 이러한 부정적 행위의 급속한 증가와 비윤리적 불건전정보의 유통현상에 대해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인터넷 혁명이 주도하고 있는 정보생활 공간에서의 기본적 인간권리를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법적, 윤리적 대책을 수립을 위해 활발한 제안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차단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포함해 정보통신 이용의 활성화에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등 과학기술의 도구적 합리성에 의한 지배를 비판하면서 이성적 반성을 통해 과학기

24) 박정순, "정보통신 문화와 도덕의 정체성 문제(I)," *전개논문*, p. 49.

25) Moor, James H. "The Ethics of Privacy Protection," *Library Trends*, Vol.39, No.1/2(Summer & Fall, 1990), pp.69-82.

술과 책임윤리와의 결합이라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는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소들이 설립되어 많은 학술지들을 발간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학술대회를 매우 빈번하게 개최하고 있는가 하면, 교육과정에 정보통신윤리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sup>26)</sup>

미국의 경우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정보통신 이용에 대한 범죄적 행위를 규제하는 입법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85년 텍사스주에서 최초로 해커를 처벌할 수 있는 '텍사스주 컴퓨터범죄법'을 제정한 이후 미국의 각주에서 컴퓨터관련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최근들어 외설물이 범람하고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불건전정보 유통을 처벌, 규제하기 위해 1995년 6월 상원에서 '통신예절법(CDA : Communication Decency Act)'을 제정하였으나, 1996년 2월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온라인상의 불건전정보에 대한 규제방향 정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1996년에는 데이터베이스보호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투자 및 지적재산권 침해방지법안을 마련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여러 정보처리분야 전문가 협회에서 자체의 윤리강령들을 제정, 채택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요약하여 보면 <표 4>와 같다.<sup>27)</sup>

<표 4>에 나타난 정보처리분야 전문가협회 가운데 미국에서 컴퓨터전문가들의 가장 큰 조직체중의 하나인 컴퓨터기기협회(ACM)는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전문가의 행동규약을 제정하고 있다. 이 행동규약은 다섯 가지의 규정 아래 각각 컴퓨터전문가들이 달성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는 윤리적 고려사항과 제재적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규정만을 간략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sup>28)</sup>

규정 1 : ACM의 구성원은 항상 성실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규정 2 : ACM의 구성원은 그의 능력과 그리고 직업의 능력과 위신을 고양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26) 박정순, "정보통신 문화와 도덕의 정체성 문제(III)," 정보화사회, (1997, 9), p. 46.

27) 김성안, "정보윤리의식의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제53집(1996, 8), pp. 599-600.

28) Deborah G. Johnson, 컴퓨터윤리학, 고대만 등역 (서울 : 한울아카데미, 1997), pp. 60-64.

규정 3 : ACM의 구성원은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한다.

규정 4 : ACM의 구성원은 직업적 책임을 가지고 행동해야만 한다.

규정 5 : ACM의 구성원은 인류복지의 진보를 위해 그의 특별한 지식과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표 4〉 정보처리 전문가 집단의 윤리강령

단체명	설립연도	회원수	윤리강령의 특징
DPMA *	1961	35,000	윤리강령과 행위기준의 설정
ICCP **	1973	40,000	행위에 대한 강령과 선의의 실행에 대한 강령
ACM ***	1947	82,000	윤리법칙과 전문행위의 규칙 채택
CIPS ****	1958	6,000	정보시스템 전문가의 자격시험 실시
BCS *****	1967	34,000	정보처리분야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직무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설정

- DPMA \*      데이터처리관리협회(DPMA : Data Processing Management Association)
- ICCP \*\*     컴퓨터전문가자격협회(ICCP : Institute for Certification of Computer Professionals)
- ACM \*\*\*    미국컴퓨터기기협회(ACM : The Association for Computer Machinery)
- CIPS \*\*\*\*    캐나다정보처리협회(CIPS : Canadian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 BCS \*\*\*\*\* 영국컴퓨터협회(BCS : British Computer Society)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컴퓨터기기협회의 규정은 다섯 가지의 이해관계 분야, 즉 성실성, 능력, 일에 대한 책임, 전문가의 책임, 인간복지의 증진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워싱턴 D.C의 컴퓨터윤리연구소가 발표한 '컴퓨터윤리 십계(Ten Commandments of Computer Ethics)'의 내용을 살펴 보면,<sup>29)</sup>

- ① 컴퓨터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한다. (Thou shalt not use a computer to harm other people)
- ② 타인의 컴퓨터작업을 방해하지 않는다. (Thou shalt not interfere with other people's compute work)

29) Steven E Miller, *Civilizing Cyberspace : Policy, Power and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New York : ACM Press, 1996), p. 323.

- ③ 타인의 파일을 탐색하지 않는다. (Thou shalt not snoop around in other people's computer files)
- ④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적질을 하지 않는다(Thou shalt not use a computer to steal)
- ⑤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다. (Thou shalt not use a computer to bear false witness)
- ⑥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Thou shalt not copy or use proprietary software for which you have not paid)
- ⑦ 허가없이 타인의 컴퓨터자원을 이용하지 않는다. (Thou shalt not use other people's computer resources without authorization)
- ⑧ 타인의 지적 산물을 사용(私用)하지 않는다. (Thou shalt not appropriate other people's intellectual output)
- ⑨ 당신이 작성한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을 생각하라(Thou shalt think about the social consequences of the program you write)
- ⑩ 배려와 존중의 모습을 보이는 태도로 컴퓨터를 이용하라(Thou shalt use a computer in ways that show consideration and respect)

미국 대부분의 컴퓨터교육기관이나 대학들은 이와 비슷한 내용의 컴퓨터윤리 강령을 정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상의 불건전 정보 규제와 함께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정보통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국은 자기 나라 문화와 사회적 가치규범에 알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포함해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 개방성과 국제문제 등으로 불건전정보 접근에 대한 원천적 차단이 어려운 실정이라 선진국에서도 직접적인 규제와 함께 인터넷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실례로 유럽공동체(EU)는 1995년에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영국에서는 1984년에 데이터보호법을, 1990년에는 컴퓨터네트워크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 컴퓨터오용법을 제정하였고, 독일에서는 1977년에 이미 연방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1978년에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을, 1988년에는 정보처리 관련 불법행위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는 등 유럽의 각국에서도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제정과 함께 최근 인터넷의 범용화로 인해 영국에서는 인터넷 감시재단을 설립하고 인터넷 내용등급제 추진을 위한 '안전한 인터넷(Safety Net) 사업계획'을 발표, 추진하고 있는 등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에 적절한 인터넷등급제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불란서정부는 이미 1996년 10월에 공공질서,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사생활, 소비자권리, 지적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의 불법부문에 대한 제한조치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조화로운 인터넷 발전을 위한 인터넷 국제헌장을 제안한 바 있다.

일본에서도 컴퓨터범죄를 포함한 정보통신의 오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저작권법과 형법 등의 일련의 법률을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90개 이상의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로 구성된 전자네트워크협의체는 인터넷 등급제실시와 함께 인터넷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sup>30)</sup>

또한 중국 정부도 1997년 12월 30일 인터넷 사용제한 법안 및 정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죄, 정부기밀누설죄 등에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켜, 모든 인터넷 검색활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검열하여 포르노 및 해킹과 관련된 사안들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인터넷 혁명이 주도한 가상공간(cyber space)에서의 기본적인 간권리를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시도도 추진되고 있다. 1997년 11월 미국 전자프런티어 재단(EFF)의 로버트 젤먼은 가상공간에서의 정보권의 행사와 그에 따른 존중, 관용, 배려 등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사이버인권(cyber rights) 선언문 초안을 세계 네티즌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하였다. 젤먼은 우리 사회가 "소유 중심에서 정보 중심의 구조로 변화하면서 인터넷이 이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새로운 힘의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정보화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온라인에서 자기 생각과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온라인 공동체와 정보에 제한없이 접근하며, 암호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화 시대의 인간 기본권으로서 '사이버

30) 한세외, "정보통신윤리 정착을 위한 각국의 움직임," 정보화로 가는 길, 통권 12호(1998, 4), p. 52

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sup>31)</sup>

그 사이버 인간 권리선언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 ① 누구나 온라인에서 자기 사생활과 익명,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② 누구나 생각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신념과 종교를 명시할 자유를 포함한다.
- ③ 누구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에 접속하거나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 ④ 사전동의 없이 누구도 원하지 않는 대량의 전자우편, 서비스를 방해하는 접속이나 프로그램으로 고통받아서 안된다.
- ⑤ 누구도 온라인의 동의, 협정과정에서 임의의 감시를 받아서는 안된다.
- ⑥ 네티즌은 상호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며, 서비스 제공자나 개인, 단체사용자 그리고 인권단체들 사이에서 진보의 수단과 성취의 보편적 잣대로서 이 사이버 인권을 주창한다.

이상과 같은 시도와 함께 최근에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공동체(EU) 등에서도 정보시스템보안지침 마련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나 유해 정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제기구에서도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선진국에서의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은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

31) 한겨레신문, 1998년, 5월, 11일, 11면.

## V. 정보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운동과 교육

### 1. 정보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운동

#### 1) 정보관련 전문가들의 활동과 대책

정보사회에서 해커,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불건전정보의 유통, 정보유출과 변조,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범죄는 이제 법에 의해서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윤리의식 특히 정보처리 관련 윤리의식의 교육과 전문가들의 역할이 절실하다. 이러한 인식에 힘입어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많은 전문가집단들이 자체의 윤리강령을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미 국내에서도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를 비롯한 컴퓨터 관련 전문가들 사이의 윤리적 품행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통신 윤리 정착을 통해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문가단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 보자.

####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 위원회는 국내에서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최소화 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정착시키기 위해 1995년 4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정기구로 설립되었으며, 불건전 정보 유통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불건전 정보센터 운영, 불건전 정보유통 방지 및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활동 그리고 건전한 정보통신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1997년 정보통신사업자윤리협의회와 정보통신윤리연구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일반인에게 정보통신 윤리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보통신윤리강령'과 '정보윤리심의회기준'을 발표하면서 정보통신윤리 캠페인을 전개하여 왔다. 이 위원회의 윤리강령은 정의로운 정보복지사회라는 이상을 표현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지적 재산권존중 등 중요한 도덕원칙들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위원회는 한국전산원에 요청하여 정보통신이용자가 선별적으로 불건전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NCA패트롤)를 개발, 지난해 9월부터 무료로 보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에는 불건전정보 위반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거하여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법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2) 한국정보 보호센터

이 센터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윤리와 책임이 원칙으로 통용되는 정보통신 기반 확충을 위해 대학생 및 청소년들을 위한 해킹 관련 법령안내집을 발간, 전국의 대학 및 중고등학교, PC통신 이용자들에게 배포하였는가 하면, 1997년 6월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주최로 '정보제공자의 역할과 윤리'라는 테마로 강연회를 주최하는 등 정보통신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기구인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에서는 컴퓨터 음란물 대응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있으며,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은 최근 일상생활의 주요 부분이 되고 있는 가상공간에서 인간권리를 찾기 위해 '기술정보화 시대의 사이버인권'을 선언하며 정보윤리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는 정보통신검열백서를 발간하면서 정보기본권(정보접근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인권, 사회단체들이 성숙한 정보통신문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단체의 활동외에도 컴퓨터전문가들에게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어떤 도덕적 원리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원리를 인식하고 시행하는 법률체제내에서 그들의 직업적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즉 컴퓨터전문가들은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기반 조성 및 확충과 함께 정보화 진전에 따른 정보보호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전 운용과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윤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의식전환이 절대 필요하다

특히 컴퓨터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위치에 따라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므로, 특별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sup>32)</sup>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 전

32) Johnson, 전계서, p. 16.

문가들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 창조성, 윤리의식, 책임성, 자율성, 공정한 경쟁 등과 같은 전통적 덕목을 토대로 인간위주의 정보시스템 구축,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우선적 고려, 전문성 계발, 어린이 및 청소년의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정보통신윤리강령 채택과 그 보급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윤리강령의 다양한 해석에 따른 윤리적 혼란의 잠재성을 배제하고 여러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통합된 윤리강령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직업인 윤리세계에서 도덕체계는 전문직업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사회와 전문직업 자체간의 일련의 상호의무 관계라 할 수 있다. 사회는 여러 부문에서 발생하는 활동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직업인에게 임무를 부여하며, 직업인은 그 임무를 자신의 역할로서 수행하여야 한다.<sup>33)</sup> 이는 전문직업적 도덕체계는 사회도덕체계의 하부체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직업인들은 독립개체로서 전문직업의 도덕체계의 규범들을 준수한다는 관점에서 정보기술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도덕적 책임과 함께 정보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부여된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컴퓨터 전문가들은 컴퓨터 관련 범죄를 기술력과 법적 대응에만 맡기기 보다는 자신들과 일반인들이 컴퓨터와 관련된 직업세계 및 그 속에서의 윤리적 차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활동하여야 한다. 아울러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처리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정보기술의 사용에 대한 윤리적 원칙의 적용을 재평가하고, 윤리적 실행에 필요한 새로운 규약 채택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 2) 정부의 활동과 대책

이미 정부는 정보화사회에 대비해 1995년 8월 정보화 정책의 기본 골격이 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의 생산자와 소프트웨어 등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용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정보통신의 보급과 이용의 보편적 확대에 따라 수반되는 부작용과 역기능을 예방하고 최소화 하려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996년 10월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정보화입국을 향한 정책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는 1998년부

33) Guy A. Marco, "Ethics for Librarians: A Narrow View,"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Vol.28, No.1(Mar. 1996), p. 33.

터 2002년 까지 5년간 2,000억원을 투입하여 정보사회의 주요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료 및 프로그램의 변조, 시스템의 파괴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보호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범세계적 네트워크화의 진전, 다양한 새로운 응용서비스의 출현속에서도 아직 정보기술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고 있어, 정보화사회에 관련된 기존의 법적, 기술적 안전대책은 급속한 속도로 진부화 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를 포함한 새로운 정보기술 활용에 치중하였을 뿐 이돌이 초래하는 윤리적 문제 인식에는 매우 소홀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에 지장을 주고 있다.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은 기술적 인프라 구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21세기 우리 나라의 정보문화의 원형을 구축에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정보화 촉진과 함께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에 대비한 법률제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정보화 사회에서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국내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전자적 통신매체의 부정적 현상을 우려해 정보통신 윤리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가 하면, 안전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축하는 기술적 차원에만 의존해서는 미흡하며 교육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제어해 주는 능력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보기술의 한계와 교육의 역할을 강조<sup>34)</sup>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sup>35)</sup>하고 있는 등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통신윤리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sup>36)</sup>

34) 이동한, "정보문화의 기술윤리와 교육의 역할," 정보과학회지, 제14권 제12호(1996, 12), pp. 60-64

35) 김영문, 이재홍, 손정임, "컴퓨터범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산업정보학회, 한국정보시스템학회 '98춘계공동학술대회발표논문집, pp. 99-105.

36) 박정렬, "정보사회와 정보통신윤리," 정보화론 가는 길, 통권 12호(1996, 4), pp. 32-33.

- ① 민간자율의 불건전정보 유통방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기능을 강화시키고,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불건전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 윤리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며,
- ②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대책과 함께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정보통신사업자 등 민간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있는 인터넷 정보내용 등급제(PICS: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를 도입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사업자 그리고 민간단체 등이 적극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 ③ 정보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터넷 불건전정보 차단소프트웨어의 보급과 실시간 정버시스템 침입방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기술, 컴퓨터에 이터파일 보호기술 등 기술개발도 활성화하고,
- ④ 정보사회의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정보통신윤리캠페인을 펼치며, TV, PC통신,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윤리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 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위법정보나 유해정보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국제규범 제정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선진국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한다.

앞으로의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은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급속한 변화를 보여주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와 정서에 적절한 정보사회를 형성하고 정보의 수요가 점차 개별화, 다양화 되어가는 사회적 현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는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고르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흐름의 편중과 왜곡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정보사회 핵심요소의 하나인 정보유통의 규제와 제한된 접근을 보장<sup>37)</sup> 등 정보통신의 효율성

37) Moor, 전개논문, pp. 74-80.

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의식과 규범, 제도확립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바람직한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책으로는 먼저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을 강화, 촉진하고 정보화사회가 만들어 내는 역기능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한 방법으로 정보사회의 윤리강령 제정과 실천을 들 수 있다. 즉 정보화 사회의 정착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다양한 불건전 정보문화와 활용행태를 개선하여 정보화의 역기능 현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간의 비윤리적 행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텔레커뮤니케이션과 가상현실의 사회와 공동체에서 이들을 인도하고, 행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지침이 되는 새롭고 강력한 윤리체계의 필요성도 절실하다.

## 2. 정보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

정보통신윤리의 발전 단계와 최근 동향을 살펴 보면, 네트워크상의 에티켓이라는 의미에서 네티켓(netiquette)이라고도 불리는 컴퓨터 윤리학(computer ethics)은 컴퓨터 기술에 의해 창조되고, 변형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1970년대 중반 월터 매너(Walter Maner)가 최초로 사용하였다. 그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컴퓨터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나 정책들의 진공상태를 윤리적 원리로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윤리학을 대학교과과정에 도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컴퓨터윤리학은 특정한 상황의 윤리적 차원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생성한 시스템과 데이터를 한순간에 파괴하는 사람들의 감시, 감독을 위해 첨단기술을 이용한 방어장치를 개발,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비용, 고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례는 이미 미국의 경우 경영대학원, 공과대학 및 의학 교육 부문에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38)</sup>

이처럼 컴퓨터기술의 윤리적 문제과 개인적, 사회적 정책들을 포괄하고 있는 컴퓨

38) 황석만, 전개논문, p. 220.

터윤리학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 컴퓨터윤리학의 제2세대라 할 수 있는 전지구적 정보윤리학(global information ethics)의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전지구적 정보윤리학은

- ① 정보부자와 빈자사이의 불평등,
- ② 정보의 집중적 유통에 따른 사회적 구조조정과 혼란,
- ③ 정보체제의 집중화와 정보전달 수단의 소유 집중화,
- ④ 영어 제국주의와 전문화된 기술주의,
- ⑤ 정보에 대한 공용적, 무상적 접근의 감축,
- ⑥ 문화침식과 문화자립성의 취약성 등을 적용영역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정보보호분야 고급 연구개발인력 양상과 정보통신 분야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에 개교한 한국정보통신대학원의 정보통신경영학부에는 컴퓨터윤리 교과목을 개설하여<sup>39)</sup> 기술발전과 윤리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대학에서는 정보처리 등 수많은 컴퓨터관련 교육과목만 진행되고 있을 뿐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현실이다.

최근 국내의 신문사들과 기업체들은 정보검색대회 등 인터넷 강좌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자금과 기자재를 지원하여 인터넷의 대중화에 추진하여 왔는데, 이들은 대부분 정보기술의 보급과 활용을 강조함으로써 대부분 인터넷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초중등학교의 현행 6차 교육과정 개편에서도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과정이 매우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어<sup>40)</sup> 윤리적 인식능력과 태도함양에 소극적인 면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적합한 사회문화적 의식 및 규범을 형성, 확산시켜 정보화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위한 정보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근로자는 보다 윤리적이면서 창의적인 인간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주입식교육으로는 윤리성을 함양하고 창의적인 사람을

39)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발전대책(1998-2002)** (서울: 정보통신부, 1997), pp. 83-84.

40) 추병완, **전계논문**, pp. 101-102.

육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초중등학교에서부터 건전한 시민으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컴퓨터시대의 윤리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윤리적 쟁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교과목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기존 유관과목에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 이론적인 면과 실천적 면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윤리에서처럼 정보통신윤리도 그 적절한 윤리학적 모델을 설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우선 사회과학적 정보사회이론들과 철학적 윤리학설들을 접합시키는 학제적 시도를 제기<sup>41)</sup>하고 있는가 하면, 컴퓨터 윤리 교육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이 포함<sup>42)</sup>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① 컴퓨터 윤리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핵심개념으로 책임감, 소유권, 프라이버시, 자율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윤리적 개념들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② 컴퓨터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포괄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적인 역할과 덕성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직업윤리 및 공공정책의 차원에서 개인 및 사회의 윤리적 역할과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포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분야의 다른 각종 교육기관의 정보통신 교육과정에서도 정보통신윤리 강좌를 개설하여 통신에 대한 윤리적 개념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각 개인들이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일반사회인들에게도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성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다 많은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윤리의식의 확립은 컴퓨터 전문가와 같은 특정한 대상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보윤리의식 확립은 정보화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정보자원을 효율적 활용하여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정보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건전한 정보화사회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컴퓨터 및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책임을

41) 박준순, "정보통신문화와 도덕의 정체성문제(III)," p. 45.

42) 추병완, 전개논문, p. 104.

다루는 교육을 통해 정보화사회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예방하면서,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기술의 활용이 지니고 있는 윤리적 측면들을 인식하여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때 정보윤리의식은 조기에 확고하게 정착될 것이다. 이를 위한 정보윤리교육에는 특히 정보통신 윤리강령이나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등과 같은 구체적인 윤리강령이나 법규에 대한 학습을 병행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아울러 정보화 사회의 가능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직된 교육체계를 변환시켜 인간중심적 정보화속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윤리적인 인간성 실현을 보편적 가치로 추구하는 교육기반 형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도구적 합리성에 의한 지배를 비판하면서도 이성적 반성과 새로운 지향을 통해 과학기술과 책임윤리와의 결합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정보화 시대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인식능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 VI. 요약 및 결론

컴퓨터기술과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화 사회는 급진전되어 왔으며, 앞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사회에서 모든 정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보사회로의 진전을 기술적 추진력에 의존하였기에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견인력이 성숙되지 못하여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적, 사회적, 윤리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기술이 야기한 문제를 새로운 기술이나 법적, 제도적 방안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보기술의 예상되는 사회적 결과를 보다 폭넓게 고려하여 정보화 사회에서 인간 삶의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지니고 있는 우선성과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사회의 윤리적 문제는 개인적인 책임의식의 차원에 국한시켜 다루어지기



보다는 불법적이거나 불건전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과 사회의 공동체적 욕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윤리강령의 제정과 실천을 통한 방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함께 정보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의 자정노력이 적극 요구되고 있다. 이는 전문직업윤리가 일반윤리 보다 특수하기 때문에 윤리적 측면에서 전문직업인이 내리는 판단이 보다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처리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정보기술의 사용에 대한 윤리적 원칙의 적용을 재평가하고, 윤리적 실행에 필요한 새로운 규약 채택에 적극 앞장서 올바른 정보문화를 창달하며 자유롭고 책임있는 정보사회시민(infotizen)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 현상을 법적,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초중등학교는 물론 정보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에서는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교육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근본을 이루는 원칙과 이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포함한 새로운 정보매체 사용할 때 예절과 윤리의식, 나아가 이러한 매체들이 지니는 사회적 영향력 같은 구조적 의미까지를 담고 있는 정보윤리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시대의 심각한 윤리적 문제들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윤리적 인식능력과 태도를 함양시켜 인간과 기술이 조화된 고도의 바람직한 정보사회를 전개해 갈 수 있도록 정보통신 미디어 교육을 더욱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성언. "정보윤리의식의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제53집(1996, 8), pp. 591-609.
- 박정순. "정보통신문화와 도덕의 정체성 문제(I)." **정보화사회**, 통권115호(1997, 7), pp. 42-49.
- \_\_\_\_\_. "정보통신문화와 도덕의 정체성 문제(II)." **정보화사회**, 통권116호(1997, 8), pp. 52-56.
- \_\_\_\_\_. "정보통신문화와 도덕의 정체성 문제(III)." **정보화사회**, 통권117호(1997, 9), pp. 40-46.
- 박정렬. "정보사회와 정보통신윤리." **정보화로 가는 길**, 통권12호(1998, 4), pp. 30-33.
- 이동환. "정보문화의 기술윤리와 교육의 역할." **정보과학회지**, 제14권, 제2호(1996, 12), pp. 60-64.
- 이상철. **직업윤리**. 서울 : 정림사, 1998.
-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 발전대책(1998-2002)**. 서울 : 정보통신부, 1997.
- 추병완. "컴퓨터 윤리교육의 과제." **한국교육**, 제24권, 제1호(1997), pp.87-111.
- 최두진.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신정보문화 확산 전략." **정보화동향**, 제1권, 제4호(1997, 12), pp. 11-27.
- 한국전산원. **1997 국가정보화백서**. 용인 : 동연구원, 1998.
- 한국전산원. **정보사회 촉진방안 연구 '97 연구 개발 결과보고서**. 용인 : 동연구원, 1997.
- 한세억. "정보통신윤리 정착을 위한 각국의 움직임." **정보화로 가는 길**, 통권 12호(1998, 4), pp. 50-53.
- 한세억. "정보회촉진기본법의 제정맥락과 설명모형." **정보사회연구**, 제9권, 제2호(1997, 가을), pp. 51-70.
- Bernier, Charles L. "Ethics of Knowing."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36, No.3(May 1985), pp. 211-212.
- Blake, Virgil L. "The Other Dimension of Professionalism." *Public & Access Services Quarterly*, Vol.2, No.1(1996), pp. 13-39.

- Buchanan, Elizabeth Anne. "Ethical Transformations in a Global Information Age." *Technical Services Quarterly*, Vol. 13, No.3/4(1996), pp.23-38.
- Danielson, Elena S. "Ethics and Reference Services." *Reference Librarian*, No.56(1997), pp. 107-124.
- Marco, Guy A. "Ethics for Librarians : A Narrow View,"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Vol. 28, No.1(Mar. 1996), pp. 33-38.
- Miller, Steven E. *Civilizing Cyberspace : Policy, Power and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New York : ACM Press, 1996.
- Moor, James H. "The Ethics of Privacy Protection." *Library Trends*, Vol.39, No.1/2 (Summer/Fall 1990), pp. 69-82.
- Smith, Martha Montague. "Infoethics for Leaders : Models of Moral Agency in the Information Environment." *Library Trends*, Vol.40, No.3(Winter 1992), pp. 553-570.

## A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Ethics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Lee, Kyung-Ho\*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categorically social and ethical problems related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n to propose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problems. For this purpose, the study examines the information ethics and information-related ethical education in some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suggests a measure to establish a desirable information ethics which, through the roles of information experts can increase the convenience of the information society.

Particularly, information should have been used in the right manner but it is not. This has caused legal and technical problems and now there is a need for cultural, societal and ethical changes.

In fact, new technology and legal - institutional devices may solve those problems caused by the development. However, we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human in life by taking expected social efforts into broader consideration.

It is to be desired, above all, that ethical problems should be discussed toward respecting the interests of both individuals and society with the protection of the illegal circulation of unlawful and unhealthy information.

Consequently,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it is required that remove the negative effects both information providers and users themselves through the

---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aegu University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information ethics doctrine. The reason is that professionals' decision may be more specific than others.

Therefore, specialists who work information fields including computers should reevaluate the application of ethics and make new regulations.

By doing this the rightful advancement of information culture can be accomplished and responsible infortizen can be created.

Futhermore, primary schools and other institutions, which train tchnical communication specialists, should teach technical skills, computers, as well as ethnological consciousness when they use information mediums.